

2013년 상반기 노동계를 돌아본다!

통상임금 논란, 진주의료원 폐업, 정년60세 연장, KT노조 한국노총 가입 등 눈길



1. 진주의료원 폐업

지난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공문을 보내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산 조례안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무시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 위법이라는 것. 현행 법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정부 주무장관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을 다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홍 도지사는 복지부 재의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하며, 재의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여야는 5월 31일 원내 지도부 회담을 갖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홍 도지사가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주의료원은 올해초 폐쇄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홍 도지사가 전면에서 나서 의료원 폐쇄 여론을 이끌었다. 홍 지사는 2월말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정한 지 3개월 만인 5월 29일, 사회각계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폐업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뿐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의료원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 문제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 상황을 봐야 한다.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어 민간

병원들도 문을 닫고 철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통상임금논란 최대 이슈 등극

관련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상반기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으로 그 동안 정기상여금 등 근로시간과 관계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공방이 심화됐다.

이와 관련 KT노동조합은 5월 30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상임금 논란은 복잡한 임금체계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리는 근로시간단축, 경제민주화 과제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노동계는 큰 틀에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정식 원장은 "통상임금이 새삼스레 논란이 되는 것은 상여금 규모가 커져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범위를 정부와 기업이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대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대 이철수 교수는 "70년대 후반부터 이어온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과 사용자의 임금 유연화 전략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수당백화점이 됐고,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원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소정근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실질적 요소와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법치국가라면 대법원판례를 먼저 존중하고, 기업의 단체협약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3.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지난 4월 30일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정년연장은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해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수명은 여성이 84세로 세계 8위, 남성은 77.3세로 26위를 기록했다.

8년간의 괴리



또 유례없이 빠른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불안, 노인층 빈곤위험에도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60세 이후에도 숙련된 노련함과 경험, 지식의 축적으로 충분히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고령자는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으로 돌발상황에 대한 처리능력과 정확한 문제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후배지도 및 육성능력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재계가 주장하는 고령자의 생산성저하 트집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 현상과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정년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보통 8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퇴직과 연금수급 시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년제 정비도 불가피하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은 아예 정년제를 강제연령제로 간주해 폐지하거나 법적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OECD 역시 정년제도를 연령차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일본은 지난해 65세 정년을 법제화하기로 했고, 중국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 대체휴일제 논란

대체휴일제 추진이 상반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가라 앉았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그 다음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정부와 일부 여당위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따라서 이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지난 2월 21일 발표된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대체휴일제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2008년 처음 등장한 후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의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속도를 낼 듯 보였다.

일본은 1998년부터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단기 휴가가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산업이 활성화 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근로자 92.7%가 대체휴일 도입을 찬성했다고 밝히며 대체휴일제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히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 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명목상 공휴일 수는 미국(14일), 일본(15일), 독일(15일)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실제 공휴일 수는 6~11일 에 불과하다.



5. 민주노총 내홍과 KT노동조합 한국노총 가입

집행부 선출 선거가 무산된 후 내홍을 거듭하던 민주노총이 5월 22일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선거논란을 일단락시켰다.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7월께 재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3일(화)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한 민주노총 7기 위원장 선거가 지난 3월에 이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또 무산되면서 최악의 혼란에 빠졌었다. 지난해 11월 김영훈 전 위원장의 사퇴 후 반년 째 지도부 공백상태로, 5월 1일 노동절 행사도 처음으로 위원장 공석으로 치렀다.

선거에 나섰던 이갑용 후보측은 “오늘을 기해 민주노총은 죽었다”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 내부에서도 “잇단 선거실패는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 세력간 갈등이 누적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

적이었다.

사실 민주노총의 추락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10여년 이상 국내 노동계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대표 목소리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정파간 패권장악에 치우친 모습으로 얼룩졌고, 그 결과는 조합원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정파갈등, 성추문, 부정부패 등 잇단 악재로 회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임원직선제 유예안 투표에 부정,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는 2005년과 2008년에 이은 세 번째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3월 11일 '2009년 민주노총 탈퇴 후, 3년 8개월만에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4월 30일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가입을 확정했다. KT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가입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확대 ▲노동조합·KT사수 및 조합원 고용안정 강화 ▲방송통신미디어 규제에 맞서 대정부 교섭력 확충 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 후 KT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HOST운동 및 UCC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이제는 성격이 유사한 더 큰 그릇, 더 큰 연대를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전파에 앞장설 때가 됐다” 고 강조했다.

한편,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윤모 위원장을 최두환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6.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복직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55명이 지난 3월 1일 전원 복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희망 퇴직자와 정리해고자는 복직되지 않았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3년간 무급휴직자 복직의 우선 과제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생산물량 증대에 노력해왔다. 이들은 아직 흑자전환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판매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신규 해외시장 진출, 상품성 개선모델 출시 등 시장확대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또 노동조합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조속한 복직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용차 노사는 그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노사상생을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것이다. 3/3